

연구논문

제주4·3사건 당시 대중운동과 무장투쟁*

朴贊殖**

1. 머리말
2. '3·1사건' 이후 대중운동
3. '2·7투쟁'과 무장투쟁 결정
4. 무장봉기 발발과 평화협상
5. 5·10선거 거부투쟁
6. 북한정권 수립 '지하선거' 참여
7. 맺음말

■ 요약

본고는 기존연구에서 잘 활용되지 않았던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와 판결문 등 대중운동 및 무장투쟁의 주체와 관련된 사료를 중심으로 4·3 당시 대중운동과 무장투쟁의 실상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 결과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대중운동과 무장투쟁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한 제주 4·3사건의 전개 양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였고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발굴할 수 있었다.

1947년 '3·1사건' 이후 전개된 각 지역별 대중운동, 1948년 '2·7투쟁'의 새로운 실상을 정리하여 4·3무장봉기의 발발 배경을 이해하였다. 무장봉기 결정 과정에서 경비대 9연대원 동원과 제주읍내 공격으로써 제주도 일원을 장악하려는 목표가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KRF-2006-353-A00012).

** 제주학연구센터장.

좌절된 사실 등도 새롭게 밝혔다. 무장봉기 발발과 무력충돌, 평화협상 추진, 5·10선거 거부투쟁, 북한정권 수립 ‘지하선거’에 대한 내용도 재구성했다.

이 글은 4·3 당시 대중운동과 무장투쟁의 표면적인 실상을 드러낸 글로서 앞으로 새로 발굴한 자료와 기존 인용된 자료들과의 대조 분석을 통한 투쟁의 지도부 및 참여자의 구성 및 활동, 당시 사회상에 대한 면밀한 해석적 연구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대중운동, 무장투쟁,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4·3 판결문, 2·7투쟁, 평화협상, 5·10선거 거부투쟁

1. 머리말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동안 벌어진 제주4·3사건¹⁾은 한국현대사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비극 가운데 하나였다. 국제적 냉전과 국내적 분단으로 인한 외적 조건과 제주도 내부의 갈등이 결합된 이 사건으로 2만 명 이상의 제주민이 희생되었다.

4·3 연구는 처음부터 현실 정치권력과 이데올로기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4·3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논의는 사태 진압과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서 시작하여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 이후 항쟁 논의가 대두하면서 4·3의 본격적인 논쟁이 이루어졌고 쟁점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2003년 확정된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는 기초적인 사실을 실증적

1)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2020년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는 사건의 명칭을 ‘제주4·3사건’이라고 적기하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1947년 ‘3·1사건’으로부터 1954년 9월까지 7년여에 걸친 총체적 사건을 말한다. 본고에서 서술하는 ‘대중운동’과 ‘무장투쟁’이란 용어는 이 사건의 한 축을 담당한 제주도 인민위원회, 남로당 제주도당, 제주도 인민유격대(무장대)와 연계된 움직임에 주목하여 쓴 용어임을 밝혀둔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공식 명칭인 ‘제주4·3사건’을 줄여서 ‘4·3’이라고도 쓸 것이다. ‘4·3’은 앞으로 이 사건의 공식 명칭(正名)이 바뀔 수 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기호로 볼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으로 분석·정리한 최초의 공식 텍스트로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자료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4·3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미해결 과제가 여럿 남아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진상보고서가 많은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의 결과물이지만, 아직까지도 무장투쟁의 주체인 무장대의 실상과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부족하다.

한편 1963년 제주출신 재일동포 김봉현·김민주가 출간한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는 주로 4·3 ‘무장투쟁’에 참여하였던 지도부의 입장에서 서술 되어 있다. 이 책은 연구서라기보다는 기록으로서 증언자료집의 성격을 강하게 띠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대두한 민중항쟁론에 입각한 연구는 4·3을 제주민의 시각에서 보고자하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신문 기사, 미국 자료, 구술자료에 의존했다는 연구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필자는 기존 연구에서 잘 활용되지 않았던 무장대가 직접 생산한 자료와 대중운동과 무장투쟁의 주체와 관련된 판결문 사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4·3 당시 대중운동과 무장투쟁의 전개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경찰 출신 인사가 비장하여 왔던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이하 「투쟁보고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4·3 자료 가운데 재산 유격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²⁾ 일부 연구자는 경찰출신자가 소장한 자료라서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하였다.³⁾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한 정밀한 사료

2) 이 자료는 1949년 6월 7일 화북지서 경찰도벌대가 무장대 아지트를 급습하여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노획한 문서로서, 당시 제주도경찰국에서 필사하여 과장급 간부들에게 배포되었다. 당시 문서를 직접 입수한 화북지서장 문창송이 1995년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이란 이름으로 편찬하여 출간하였다. 이 자료는 현전하는 유일의 무장대 자체 생산 문건으로서, 여기에는 1948년 3월부터 7월까지 한라산 재산 무장대의 활동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3) 서중석,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108~109쪽. 이 자료의 내용과 제민일보 취재반의 채록 내용, 김익렬의 회고록, 기타 증언록 등과 대조하여 상위한 사실을 제기했는데, 당대 원자료와 후대 기억을 상호 비교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투쟁보고서」 내용을 4월 3일 제주도 각 지역별 경찰지서 습격 과정에 대한 구술자료, 1948년 8월 김달삼의 해주인민대표자대회 연설문 내용, 4·3 관련자의 판결문 내용 등과 비교 검토해 보면 자료의

비판을 수행한다면 무장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셈이다.⁴⁾

다음 4·3 관련 형사판결문과 약식명령은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며 어떤 자료에도 남아 있지 않은 기록으로서 4·3 당시 대중투쟁 및 무장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및 활동 내용 등이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4·3의 기점이 되었던 1947년 3월 1일로부터 1948년 4월 3일을 거쳐 1954년까지 4·3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수천 명에 달하였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1,562건의 4·3 관련 판결문이 소장되어 있다. 고문을 통한 허위 진술, 조직 보안을 위한 의도적 은폐, 일률적 틀로 짜인 심문조서가 대본이 된다는 사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은 사건 연관자의 경력, 사건 참여 경위, 활동 사항, 인적인 연결망, 적용 법률 등 기본 사실을 소상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투쟁보고서』와 4·3 관련 재판기록을 토대로 한 4·3 당시 대중운동과 무장투쟁의 연대기적 재구성은 앞으로 4·3 후속 연구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들 주요 자료 외에도 대중운동과 무장투쟁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구술자료집, 기고문, 신문자료, 미국 정보보고서, 제민일보 취재 성과 등을 상호 대조하며 서술하였음을 밝혀둔다.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진상조사보고서와 양정심의 연구 등에서 이 문건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만 기록 전체를 활용한 성과는 아니다. 필자는 이 자료를 중심으로 1948년 3월부터 7월까지 무장투쟁의 전개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4) 2005년 장윤식이 이 자료를 토대로 집중 검토한 유격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4·3과 역사》 5, 2005). 장윤식의 연구는 무장대의 조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무장봉기의 발발과 전개과정을 집중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다.
- 5) 4·3 관련 판결문 자료에 대한 소개는 다음 글의 4·3 행형자료 해제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박찬식, 『제주4·3사건 관련 행형자료와 형무소 재소자 - 서대문·마포·광주형무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0, 2012.

2. ‘3·1사건’ 이후 대중운동

1947년 ‘3·1사건’ 이후 지역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⁶⁾ 특히 학생과 청년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경찰 당국은 이들의 검거와 취조에 주력하였다. 1947년 5월 17일부터 미·소공동위원회가 속개되고 6·10 항일운동 기념일을 앞두게 되자 제주도내 사회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대중 운동에 나섰다. 운동의 방식은 주로 무허가 집회와 빠라 부착 활동이었다.

북촌리 거주 초천중학원생 이성규·김진태 등은 북촌리 민청 간부 이달군의 지시에 따라 “강제공출 절대반대”, “미소공동위원회 만세”, “민청 해산령을 취소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빠라를 돌담에 첩부하였다.⁷⁾ 구좌면 하도리 한문옥 등은 1947년 5월 12일 미·소공동위원회에 보낼 진정서 초안에 서문동 주민들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⁸⁾ 당시 ‘6·10 기념투쟁’의 기본 슬로건은 6·10운동의 항일 정신 계승과 친일파 민족반역자 숙청, 삼상결정 적극지지, 미소공동위원회에 보낼 결의문 작성, 당원 5배 배기운동, 하곡수집 반대, 민청 해산령 취소, 한민당·한독당의 미소공위 협의 대상 제외, 3·1사건 구속자 석방 등이었다.⁹⁾

이런 과정에서 종달리에서는 민청 회원들과 경찰 간에 무력 충돌이 빚어진 ‘6·6사건’이 일어났다.¹⁰⁾ ‘종달리 6·6사건’을 판결문에 의거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¹⁾ 종달리 민청위원장 이용화, 부위원장 부옥만, 구좌면 민청 부위원장 한태삼, 구좌면 민청위원 강기완 등이 1947년 6월 6일 오후 8시 30분경 종달리

6) 1947년 ‘3·1사건’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 집회와 총파업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2, 2006; 양정심, 『1947년 제주3·1기념대회 주도세력에 대한 소고』, 『제주3·1사건 제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제주4·3연구소, 2017.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 ①, 1994에는 3·1사건과 3·10총파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7)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1947. 6. 24).

8)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1947. 6. 24). 당시 진정서의 내용은 “임시정부수립은 인민위원회의 형태로 수립하여야 주시오” “쑬農의 토지개혁안을 실시하여 주시오” “남녀동등의 법령을 제정하여 주시오” “지방선거는 民戰의 행동강령에 의하여 실시하여 주시오” 등이었다.

9)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1947. 6. 30)

10) 『4·3은 말한다』 ①, 444~452쪽.

11)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1947. 7. 10; 1947. 7. 31).

‘두머이계’ 김두주의 집에서 종달리 민청원, 주민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종달리 민청대회를 열어 민청의 세포조직, 교양체육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밤 10시 10분경 세화지서(주임 현학립) 순경 김순영·고일승·황종욱·최화훈 등 4명은 불은빼라 첩부 및 무허가집회 등을 내사하기 위해 종달리에 이르러 자동차 정류소 앞에서 돌담에 빼라를 붙이던 청년 2명(양원민은 도주) 중 1명(김주인)을 체포하여 그로부터 민청대회를 개최 중이라는 단서를 잡고 집회 장소로 향했다. 달이난 청년 양원민으로부터 경찰이 출동했다는 소식을 들은 민청원들은 집단적으로 경찰들에게 물러들어 구타를 가했다. 이로 인해 경찰 김순영·고일승은 전치 1개월, 황종욱·최화훈은 전치 3주일의 부상을 입었다.

제주도내 각 지역의 대중운동은 1947년 8·15 기념일을 앞두고 고조되었다. 제주도 좌익 단체들은 제주읍내에서 8월 15일 기념식을 치름으로써 3·1사건 이후 탄압 국면에 놓인 세력을 다시 결집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조천리에서는 8월 13일 “8월 15일은 우리의 날”, “리민 여러분 뭉칩시다. 뭉치면 이깁니다”라는 내용의 빼라가 마을 안에 붙여졌다.¹²⁾ 선홍리 청년들은 8월 10일 선홍국민학교에서 무허가 집회하여 8·15기념일 제주읍내 집결의 건을 논의했다.¹³⁾ 조천리 황병익·신운하 등 청년들도 8월 14일 조천리 야외에서 무허가 집회하여 8·15 기념행사에 대하여 토의하였다.¹⁴⁾ 8월 15일 기념일에 제주읍내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집회는 8월 14일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 선봉으로 취소되었다.¹⁵⁾

이러한 8·15 기념일 대중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8월 13일 ‘북촌리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조천면 북촌리에서 불법 빼라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지역 주민들이 충돌하여 쌍방의 부상자를 낸 사건이다.¹⁶⁾ 북촌리 청년들은 8·15 기념투쟁을 앞두고 무허가 집회와 빼라 제작 등 대중운동에 적극 나섰다. 이 과정에서 8월 10일에는 빼라를 회수하기 위하여 출동한 제1구경찰서 경사 이철영, 운전원 김일태, 급사 김관옥 등이 청년들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일어

12)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1947. 9. 8).

13)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1947. 10. 8).

14)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1948. 4. 17).

15)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 『4·3은 말한다』 ①, 478~486쪽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16) 『진상조사보고서』, 131쪽과 『4·3은 말한다』 ①, 460~465쪽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났다. 청년들은 8월 13일 새벽에 “공출 반대”, “미소공위 성공 만세” 등을 기재한 삐라를 마을길 돌담에 부착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다려도 등지로 도피하였다. 제1구경찰서 순경 황중욱·설복용·이경구·김병택 등은 이들을 뒤쫓아 총격을 가했다. 이 발포로 10대 소녀 장운수를 비롯해 여자 2명과 남자 1명 등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에 한 소녀가 12시경 마을 공회당에 있는 사이렌을 울리자 흥분한 주민들이 몰려들어 미처 마을을 벗어나지 못한 김병택 순경 등 경찰 2명을 붙잡아 폭행을 가했다. 이어서 북촌리 주민들은 오후 2시경 함덕파출소로 몰려가서 항의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사건으로 북촌리 주민 40명이 검거되어 22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¹⁷⁾

1947년 10월 이후 제주도내 마을 내에서는 우익단체와 좌익단체 간에 무력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1947년 10월 7일 행원리에서 대동청년단원들이 지부 조직을 알리기 위해 부착한 삐라를 일부 청년들이 찢어버리자, 청년들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다. 이 사건에는 이웃 마을인 월정리 대동청년단원들까지 가담함으로써 규모가 확대되었다.¹⁸⁾ 한편 1948년 1월에는 서북청년회 김녕지부 설립을 추진하던 서청 단원 김용옥(서청 김녕지부 준비위원장)·황창성·김승걸·김경상·김영만 등이 서김녕리 조선민족청년단, 대동청년단 김녕지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김녕지부 및 김녕 경찰지서의 사무실 간판을 파괴하고 우익단체원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¹⁹⁾ 좌익단체도 아닌 우익단체 및 정규 경찰조직에 대한 서청의 폭력과 월권행위는 4·3무장봉기 발발을 앞두고 민심을 동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2·7투쟁’과 무장봉기 결정

해를 넘겨 1948년 1월초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가능한

17) 《제주신보》 1947년 8월 30일자;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1947. 10. 8; 10. 20).

18) 《제주신보》 1947년 10월 14일자.

19)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1948. 3. 22).

지역에서의 총선거' 실시로 굳어져갔다. 남한 단독선거 계획이 명백해지자 남한 내의 많은 정당과 단체에서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웠는데, 19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을 총파업으로 몰고 간 이른바 '2·7구국투쟁'이었다.²⁰⁾

제주도에서도 '2·7투쟁' 방침에 따라 각 지역에서 시위 등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제주도에서의 '2·7투쟁'의 기본 슬로건은 통일정부 수립, 유엔위원단 격퇴, 단독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군 동시 철폐, 북한식 민주계획 실시, 인민공화국 수립, 친일민족반역자 축출 등이었다.²¹⁾

조천면 함덕리에서는 2월 7일 김한추·한봉섭 등이 무허가로 집회하여 “미·소 양군 동시 철폐”, “함덕지서 신축 반대” 등의 사항을 결의하였다.²²⁾ 2월 8일에는 함덕리에서 청년들이 도로 위에 돌을 쌓아서 교통을 차단시켰는데, 마을을 통과하던 제주도청 자동차가 정차하여 돌을 치우려고 하자 12~13명의 청년들이 운전수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제1구경찰서 경찰대가 즉각 출동하여 관련자 12명을 체포하여 왔다. 제1구경찰서장 문용채는 이 사건을 2·7사건과 연관시켜 이해하였다.²³⁾ 구좌면 관내 마을에서도 2월 7일을 전후하여 ‘왓샤 시위’²⁴⁾가 전개되었다. 하도리 청년들이 2월 9일 마을에 뼈라를 부착하고 시위를 전개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설날 다음 날인 2월 11일에 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²⁵⁾

성산면에서는 2월 6일부터 시위가 전개되었다. 수산리에서 오관형·고을송

20) 남로당이 1948년에 벌인 '2·7구국투쟁'은 남북 총선거 감시의 임무를 띤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을 반대하는 투쟁이었다. 영등포 공장 지대의 전평 과업으로부터 시작된 투쟁은 농민, 사무원, 학생, 시민 등의 쟁기로 이어졌고, 군중시위, 집회, 봉화투쟁, 뼈라 살포, 쌀 투쟁, 선전활동, 학생맹휴 등이 전개되었다. 이 투쟁은 주로 7일부터 10일까지 전개되었다(김득중, 『남조선노동당과 대중운동』,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역사학연구소, 1997).

21)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4. 27).

22)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7. 30).

23) 《제주신보》 1948년 2월 12일자.

24) ‘왓샤’는 시위를 할 때 행렬이 함께 부르는 구호 소리이다.

25) 하도리 부영성도 이 사건 관련 혐의로 세화지서에 연행되어 1주일 간 조사를 받았다(부영성의 4·3위원회 증언, 2000. 12. 15).

등 20여 명이 빠라를 마을 내 도로 요소에 살포하였고, “단선반대, 정권을 인민에게 넘겨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²⁶⁾ 2월 8일에는 시위가 더욱 고조되었다. 고성리 주민 30여 명은 2월 8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오성창의 지휘 아래 2열중대형으로 고성리 2구 마을 일원에 걸쳐서 시위 행렬을 벌였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고성리 2구 향사에 모두 모여서 오성창의 사회로 “경찰이 체포하러 올 때까지 해산하지 말 것”을 결의하였다.²⁷⁾ 오조리에서도 2월 8일 청년 20여 명이 오후 3시경부터 2시간 동안 “남북통일정부 수립 만세” 등을 고창하며 시위를 전개했다.²⁸⁾

한림면 관내 마을 중에는 고산리와 저지리에서 2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지서와 고산지서 앞에 청년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월 9일 저지서에서 저지·청수·낙찬·조수 등 4개 마을 청년 150명에 의해 습격을 받았다.²⁹⁾ 2월 10일 고산지서에서는 지서 앞에 몰려와 시위하는 군중을 향해 발포,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³⁰⁾

2월 8일의 성산면 시위에 대해서 제주도 경찰당국도 주목하였다. 『제주신보』에 게재된 2월 12일자 제주경찰서장 문용채의 발표문을 인용해서 “2월 8일에 성산포에서는 5~60명의 민중이 떼를 지어 시위를 하였다”고 기사화되었다.³¹⁾ 경찰은 2·7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검거 자들에 대한 남로당 탈퇴 선언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1948년 2·7사건 이후 성산면에서는 남로당 탈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청년들이 여럿 생겨났다. 1947년 3월 10일 성산면 관내 성산리·오조리·시흥리·고성리·수산리·온평리 등 6개 마을의 청년 66명이 대거 남로당 탈퇴 성명서

26)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7. 30).

27)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1948. 4. 30);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6. 7).

28)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1948. 4. 2).

29) 『4·3은 말한다』 ①, 547쪽.

30) 『4·3은 말한다』 ①, 547~549쪽;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1948. 3. 29); 《제주신보》 1948. 2. 14. 세 자료마다 사건 날짜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판결문에는 2월 9일, 『4·3은 말한다』에는 2월 10일, 《제주신보》에는 2월 11일로 되어 있다.

31) 《제주신보》 1948년 2월 12일자. 성산면에서 벌어진 ‘2·7투쟁’에 대해서는 『4·3은 말한다』 ①, 541쪽, 546~547쪽, 550쪽에도 정리되어 있다.

를 발표하였다.³²⁾ 경찰관 린치 사건(2월 9일)이 발생했던 안덕면 사계리에서는 81명의 청년들이 남로당 탈퇴 성명을 신문에 게재하였다.³³⁾ 구좌면 세화리의 오규일은 1948년 2월 8일 경찰서에 검거된 가운데 남로당 탈퇴성명서를 작성하였다.³⁴⁾

한편 1948년 1월 22일 조천면 신촌리에서 열린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의 비밀회의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1월 중순 신촌리 출신 남로당 조직부 연락과장 김생민을 체포한 뒤 그로부터 주요 정보를 확인한 뒤 남로당 조직부 아지트가 있던 신촌리를 급습하였다. 당시 조직부장은 김달삼(본명 이승진)인데, 1948년 초에 아지트를 신촌리 민가에 두고 있었다.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모임에 참석했던 남로당 간부를 비롯한 221명이 검거된 것으로 기록되었다.³⁵⁾

1948년 3월 5·10선거를 앞둔 미군정 당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치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사령을 발동했다. 1월 22일 검거된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들은 이때 모두 석방되었다. 그러나 남로당 지도부는 조직의 노출로 인해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최대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1948년 3월 4·3무장봉기로 가는 길목에서 또 하나의 발단이 된 고문치사 사건이 조천면 지역에서 일어났다. 조천지서에 연행됐던 조천중학원생 김용철이 유치 이틀 만인 3월 6일 갑자기 숨졌다. 사체의 검시 결과 그는 고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천면 지역의 민심은 들끓었다. 조천중학원 학생들은 사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³⁶⁾ 미군정은 조천지서 경찰관 5명 전원을 구속하여 사태를 진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천지서 고문치사 사건은 3월 14일 모슬포지서에서 청년 양은하가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과 더불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4차 회의에서 거론되어 국제적인 조명을 받았다.³⁷⁾

32) 《제주신보》 1948년 3월 12일자.

33) 《제주신보》 1948년 3월 30일자.

34) 《제주신보》 1948년 2월 24일자.

35) 『진상조사보고서』, 152~156쪽.

36) 『자유를 찾아서』(김동일 증언록), 59쪽, 김민주(71세, 조천리)의 증언(2002. 7. 8).

37) 『진상조사보고서』, 149~152쪽.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와 같이 조직의 노출, 고문치사 사건과 같은 극심한 탄압 국면에 맞서서 무장투쟁을 결행하기에 이르렀다. 『투쟁보고서』에 기록된 무장투쟁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로당 제주도당 상임위원회는 3월 15일 전라남도당 오르그(조직지도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둘째 단선(單選)·단정(單政)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서 적당한 시간에 전 도민을 총궐기시키는 무장반격전을 기획 결정하였다. 3월 25일까지를 준비 기간으로 하여 도상임(島常任)(특히 투위 멤버)으로써 군위(軍委)를 조직하여 투쟁에 필요한 자위대(自衛隊) 조직(200명 예정)과 보급, 무기 준비, 선전사업 강화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분담하였다. 예정 기간을 넘어 3월 28일 비로소 재차 회합을 가져 그동안의 준비 사업에 관한 각자의 보고를 종합 검토한 결과, 4월 3일 오전 2시~4시를 기하여 별도의 전술하에 무장 반격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원 병력은 제주·조천·애월·한림·대정·중문·남원·표선 등 8개 면에서 320명으로 편성하였다. 무기는 99식 소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 25발 등을 준비했다.

1947년 말부터 1948년 초에 이르기까지 연속하여 열린 남로당 조직부의 비밀회의의 장소는 주로 신촌리에 있는 민가였다. 구체적으로 신촌리 김○○의 집, 동수동 아무개의 집 등이 판결문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³⁸⁾ 1947년 3월 이후 검거망이 좁혀지게 되자 조직과장 김생민이 조직부장 김달삼에게 건의하여 자신의 마을인 신촌리로 아지트를 옮기게 된 것이다. 1948년 1월 김생민이 검거된 뒤 신촌리가 지목을 받게 되자, 김달삼 등 지도부의 아지트는 다시 북촌리로 옮겨졌다고 한다.³⁹⁾ 무장투쟁 결정이 내려진 3월 15일 회의는 조천면 북촌리에서 열렸을 가능성이 높다.⁴⁰⁾

38)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4. 17).

39) 김생민(77세, 신촌리)의 증언(2001. 7. 13).

40) 허호준, 『제주4·3무장봉기 결정과정 고찰』, 《4·3과 역사》 7, 2007, 208쪽. 『진상조사보고서』는 이삼룡의 증언에 의존해서 2월말 신촌리 회담에서 무장봉기가 처음 결정되고 3월 15일 다시 최종 결정하였다고 했으나, 허호준이 인용한 대로 이삼룡은 다른 증언에서 3월초를 넘었다고 하여 『투쟁보고서』의 3월 15일 결정일을 뒷받침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비밀회의를 같은 시기 두 번씩이나 개최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한편 1948년 2월경 저지리 청년들이 산중에 은거하면서 죽창·철창 등을 만들며 무장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 마을 향보단장을 지낸 김군철은 “4·3사태가 나기 전에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5km 가량 떨어진 ‘한수기’ 밀림지대에서 청년들이 무장훈련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서 경찰들과 함께 현지에 가서 확인한 적이 있다”면서 “그곳에서 죽창 담금질을 하는 참기름 허벅을 비롯해 철창·죽창 등을 만들었던 흔적을 발견, 겁이 덜컥 났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사실은 즉각 경찰 상부에 보고되었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 간헐적으로 입산청년들의 무장 준비 사실이 포착되었지만, 경찰의 대응 태세는 의외로 소극적이었다.⁴¹⁾

무장대가 남긴 기록에도 “3월 20일경 한림면경 새별오름 공동묘지에서 전원 67명 흡숙 훈련 중 애월지서원 1명, 서청(西靑) 2명, 구엄 대청원(舊嚴 大靑員) 6명 계 9명이 미명(未明)에 취사장을 습격하였으므로 아부대에서 응전 발포 1발(發)로 적은 도주, 추격 도중 동무 1명 경사”이라고 하였는데,⁴²⁾ 무장봉기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농업학교 학생들로 조직된 제주인민해방군 제주읍 학생대원들은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한라산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4월 3일 무장봉기에 대비했다.⁴³⁾ 이 시기는 무장투쟁을 위한 조직 및 병기 준비와 정보수집 기간이었다.⁴⁴⁾

남로당 제주도당 상임위원회의 3월 28일 최종 회의에서는 4월 3일 새벽 무장봉기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제주읍 성내 특히 감찰청과 제1구 경찰서는 국방경비대 9연대원들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제주도내 14개 경찰지서는 유격대 및 자위대 400명을 배치하여 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경비대원 동원을 위해 남로당 프락치에게 무장 반격에 동원 가능한 병력 수를 사전에 문의한 결과, 800명 중 400명은 확실하게 동원할 수 있고 200명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하사관을 비롯한 장교급 18명을 처단하면 문제없으니 병력 동원

41) 『4·3은 말한다』 ①, 589쪽.

42) 『투쟁보고서』.

43)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6. 9; 1948. 7. 28; 1950. 2. 4).

44) 『투쟁보고서』에는 제1차 작전 시기로서, 3월 15일 무장봉기 결정으로부터 4월 2일까지 기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에 필요한 차량 5대를 보내달라는 요청과 함께 만약 배차가 안 될 때에는 도보로 습격에 가담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에 경비대 프락치와 연결된 공직원을 파견하여 감찰청 및 제1구서 습격 지령을 내리고 차량 5대를 보내고, 제주성내 거점 분쇄 연락병으로 학생 특무원 20명을 성내(제주읍내)에 침투시켰다.⁴⁵⁾

이와 같이 무장봉기 지도부에서는 국방경비대 9연대도 4월 3일 봉기에 참여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봉기 당시 남로당 대정면당 무장대의 중대장을 지냈던 김봉길의 증언에도 나타난다.

4월 2일 밤 우리는 대정골(현 대정읍 보성리)에서 보초를 쫓는데, 난데없이 서문 쪽으로 집차가 온단 말이며. 이걸 보니까 다 빈 찬데 한대가 아니라 열두 대나 되어. 운전수와 조수만 타고... 그 사람은 우리 김두옥 선생(남로당 대정면 당책)을 찾는 거라... 그날 밤 김두옥이 “오늘밤 사건이 일어나니 모든 걸 준비하라”고 해... 그 차가 간 후에도 우리는 보초를 서고 있었어. 그런데 한 시간이 채 못 되어 모슬포로 간 차가 또 돌아오는 거라... 그때 김두옥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라. ‘오늘밤 9연대가 봉기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온 것이다’하고 얘기하는 거라. 그런데 9연대 책임자(문상길 중위를 말함)가 하는 말이 ‘나는 중앙당 지시를 받고 여기 책임자로 온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중앙당의 지시를 받아야지 (제주)도당의 지시는 받을 수 없다. 그것도 몇 사람이면 모른다. 전 군인들은 봉기할 수 없다’고 해서 응하지 않았다는 거라.⁴⁶⁾

즉,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에서는 9연대도 봉기에 끌어들이려고 하였으나, 중앙당의 지시가 없다고 해서 호응하지 않는 바람에 4월 3일 당일에 9연대원들을 동원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대해서 무장대 측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불참 사유를 밝히고 있다.

도상위청책(島常委靑責)이 습격 지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국경(國警) 프락치를 만나러 갔던바 프락치 2명은 영창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황적으로

45) 『투쟁보고서』.

46) 제주4·3연구소, 《4·3장정》 6, 1993, 70쪽.

문상길 소위를 만나 본 결과 국경(國警)에는 문 소위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직속의 정통 조직과 고승옥 하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 출신 프락치 등 이중 세포로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고 하사관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무장투쟁에 경비대를 동원 참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중앙 지시가 없어서 거절하였다는 대답이었으므로 직접 재삼재사 동참을 요청하여 보았으나 여전히 중앙 지시가 없다고 거절하여 결국 국경(國警) 동원은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거점 분쇄도 실패하였다.⁴⁷⁾

위 김봉길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4월 3일 새벽 9연대를 동원하여 제주읍내 제1구 경찰서 습격을 시작으로 제주도내 전역의 장악을 목표로 세웠던 원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제1구경찰서 유치장을 습격하여 파괴하고 피검자 전부를 석방시킬 목적으로 제주읍내 거점 분쇄 연락병으로 침투시키려 했던 학생 특무원 20명의 동원도 수포로 돌아갔다.⁴⁸⁾ 결국 남로당 제주도당은 원래 계획했던 제주읍내 감찰청 및 제1구서 등 거점 공격은 포기하고 도내 12개 경찰지서 습격에 나서게 되었다.

4. 무장봉기 발발과 평화협상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제주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제1구(제주) 경찰서 관내 화북·삼양·조천·함덕·세화·외도·신엄·애월·한림지서와 제2구(서귀포) 경찰서 관내 남원·성산·대정지서 등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또한 경찰, 서북청년회 숙소와 독립축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다.⁴⁹⁾ 무장대는 4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제2차 작전 시기로서, 국방

47) 『투쟁보고서』, 국경(國警) 무장투쟁 불참 사유.

48)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6. 9; 1948. 7. 28; 1950. 2. 4).

49) 1948년 4월 3일 무장대의 습격 상황에 대해서는 『4.3은 말한다』 ②, 23~41쪽과

경비대를 동원한 제주읍 공력이 경비대의 불참으로 실패로 돌아간 후 경찰지서 습격을 주목적으로 활동한 시기로 설정하였다.⁵⁰⁾

조천지서는 약 한 달 전인 3월 6일 김용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곳이어서 경찰 대부분이 교체되어 있었다. 4월 3일 무장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투쟁보고서』에는 무장대 40여 명이 99식 총 2정으로 무장하여 지서를 포위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퇴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함덕지서에는 무장대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지만, 경찰 장두백 등 2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투쟁보고서』에는 무장대 40여 명이 99식총 2정으로 포위 습격하여 지서 내에 경찰 프락치에게 연락하여 탈출케 한 후 그의 소개로 경찰 사택을 습격하여 1명을 포로로 삼았고, 습격 과정에서 납치된 경찰의 처가 지서로 달려가며 고함을 지르자 습격 사실이 발각되어 퇴각하였다고 기록되었다. 또한 돌아오는 길에 대청(大靑) 단원 3명을 포로로 하고 서청(西靑) 숙사를 습격하여 4명을 총살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함덕지서 습격 상황에 대해서는 함덕리 대동청년단장이던 한재원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⁵¹⁾

세화지서에는 4월 3일 당시 10여 명의 경찰이 근무했다. 무장대의 습격 당시 황순경과 김순경 등 경찰 2명이 무장대가 휘두른 일본도에 맞아 부상을 당했지만, 대다수 지서 직원들은 피신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⁵²⁾ 한편 『투쟁보고서』에는 “오전 2시를 기하여 아(我)부대 약 40명이 99식 총 2정을 가지고 세화지서와 면내 최고 반동 김대홍의 집을 습격. 지서에서는 그때 숙직 중이던 서북계(西北系) 악질 경관 1명과 맹렬한 격전 끝에 이를 죽이고 카빙 총 1정, 44식총 1정을 노획, 지서를 소각하려고 했으나 석유가 없었으므로 불성공(不成功). 반동 김대홍의 집을 습격한 바 대홍이가 권총 1발을 발사하는

『진상조사보고서』, 167~173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당일 상황을 읍면별로 상세하게 기록한 『투쟁보고서』와 판결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본고에서도 지면 제약 때문에 모든 지역의 세부 상황을 다 정리하지는 못했다.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50) 『투쟁보고서』.

51) 한재원(90세, 함덕리)의 증언(2013. 1. 28).

52) 『4·3은 말한다』 ②, 35~38쪽.

바람에 비습을 느껴 퇴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산포지서에는 1947년 3·1사건 이전에는 경위를 주임으로 해서 5명이 근무했다. 그러나 3·1사건 직후인 1947년 5월 다른 지방으로부터 철도경찰 9명이 배속되어 타지 출신 경찰 수가 제주 출신보다 더 많은 지서였다. 『투쟁보고서』에는 “무장대 40여 명이 99식 총 2정으로 무장하여 지서를 포위했으나, 프락치 1명을 구출하려고 소극적 전법을 취한 것과 가지고 간 총 전부가 고장이 나서 지서 유리창과 건물 일부를 파괴한 후 경찰의 난사로 말미암아 퇴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성산포지서의 습격에는 표선면 남로당 간부인 강성렬이 지휘하고, 성산포 출신 송기현과 고성리 2구(신양리) 출신 훈순화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⁵³⁾

4·3사건 당시 대정면 관내 경찰지서는 대정지서(보성리)와 모슬포지서(하모리) 두 곳이 있었다. 무장대는 4월 3일 새벽 대정지서를 습격했다. 보성리 향사를 사무실로 쓰던 대정지서는 경찰이 3명뿐인 소규모 지서였다. 4월 3일 새벽에는 2명의 경찰이 지서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중 이무웅 순경이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이무웅은 며칠 뒤 병원에서 숨졌다. 무장대 측의 『투쟁보고서』에는, “아부대 7명(총 2정, 군도, 1본, 대검 3본, 철창 1본)이 대정지서 습격. 포위 직전 오발로 인하여 사전 발각되었으나 개(경찰) 2명뿐 숙직 중이었으므로 나오지 않았음. 아 부대에서 2발 사격 후 총 고장으로 퇴격. 개 1명 즉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주둔한 모슬포 소재 모슬포지서는 무장대의 습격을 받지 않았다. 무장대는 대동청년단 대정면 책임자인 강필생의 집에 폭발물을 투척하였다. 그는 수류탄 파편이 몸에 박히는 부상을 당했지만 목숨을 구했다.⁵⁴⁾

한림지서는 습격을 받지 지서를 지킬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무장

53)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6. 3). 남로당 성산면당 책임자인 오관형은 1948년 4월 2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4월 3일 당일에는 경찰서에 구금되어 무장봉기에 나서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54) 『진상조사보고서』 172쪽, 『4·3은 말한다』 ②, 38쪽, 《4·3장정》 6, 41~42쪽, 『투쟁보고서』.

대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아 지서 안에서의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이복출신 김록만(金祿萬) 순경이 숙소인 여관에서 무장대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또 다른 경찰관 2명도 각기 숙소에서 잠을 자다 기습을 받아 부상을 당했다. 한편 무장대는 경찰을 지서 안에 묶어 놓은 후 지목했던 우익인사의 집을 찾아다니며 공격했다. 독립축성국민회 제주도 감찰위원장 겸 한림면 위원장을 맡았던 현주선(玄周善) 등이 부상을 당했다. 이로써 이날 경찰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국민회와 서북청년회 등 우익단체원 6명이 부상을 당했다.⁵⁵⁾

무장대는 저지지서도 습격하려고 시도했으나, 사전에 정탐하러 갔던 2명의 무장대원이 지서 경찰에 발각되어 발포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⁵⁶⁾ 한림리 습격을 마친 무장대는 4곳에서 전선을 절단하고, 2곳의 도로를 파괴한 후 집합지정 장소인 ‘미마루동산’에 집결하여 금악리까지 무장 시위를 단행하였다. 오전 9시 아지트에 귀환한 후 저지지서원 6명과 경찰 후원회원 25명이 금악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출동하여 전투를 펼치기도 했다.⁵⁷⁾

신엄지서 관내 마을인 애월면 구엄리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구엄리는 우익인사의 영향력이 큰 마을이었다. 무장대 측 자료에 의하면, 이날 구엄리 습격에 모두 120여 명이 동원됐으며, 무장은 소총 4정, 다이너마이트 5발, 나머지는 죽창이었다고 한다. 지서 주변에 40명을 배치해 습격하려는 순간, 이웃 애월지서를 공격하는 습격조가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앞당겨 행동에 옮기는 바람에 사전에 발각되어 지서 측으로부터 응전을 받아 지서 점령에는 실패했다고 한다. 무장대는 이날 구엄리 문기찬(31, 구엄리 민보단장), 문창순(31), 조매선(여, 58, 문기찬의 모친)과 우익 활동을 하던 문영백(文永伯)의 10대 딸 두 명을 살해했다. 또한 경찰관 1명이 중상을 입었고, 교전 과정에서 무장대 두 명이 사살됐다. 애월지서 습격에는 무장대 80명이 동원됐다.⁵⁸⁾

무장대의 경찰지서를 향한 공격은 4월 3일 하루에 그치지 않았다.⁵⁹⁾ 무장대

55) 『진상조사보고서』 171쪽, 『4·3은 말한다』 ②, 30~32쪽, 제주4·3연구소, 『통일되민 다 말허쿠다』, 《제주항쟁》 창간호, 248~251쪽,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6. 3); 김익렬, 『4·3의 진실』, 『4·3은 말한다』 ②, 293~297쪽, 『투쟁보고서』.

56)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6. 2);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6. 9); 『투쟁보고서』.

57) 『투쟁보고서』.

58) 『진상조사보고서』 170~171쪽, 『4·3은 말한다』 ②, 26~30, 40쪽, 『투쟁보고서』.

<표 1> 4월 3일 직후 무장대의 제주읍내 마을 공격 상황 일지

날짜	마을	무장대 병력	공격 대상	결과	비고
4.4	영평리	30명	대청 사무소	대청 동원부장(오승조) 피살 2명 부상	
	월평리	30명	경찰 집	가옥 파괴	
4.8	이호리	4명	대청 간부 집	대청 간부(이도연) 피살	
	삼양리	8명	삼양지서	사전 발각으로 퇴각	2차 습격
4.12	오라리	4명	경찰 집	경찰 송원화 부친(송인규) 피살	
4.14	외도리		외도지서	무장대원 사망	2차 습격
4.16	회복리	5명	대청원	경찰 1명(임선길) 피살	
4.18	삼양리	22명	삼양지서	사전 발각, 무장대원 1명 사망	3차 습격
4.19	외도리		외도지서	경찰 1명 부상, 지서 파괴	3차 습격
4.20	월평리			스파이 2명 피살	2차 습격
4.27	회복리	16명	구장 집	구장(오두현) 피살	
4.28	노형리	22명	상호 교전	경찰 3명 부상	3차 습격

의 가장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었던 제주읍내 상황(4월)을 『투쟁보고서』에 의거해서 일지로 작성하면 위 <표 1>과 같다.

조천면 관내에서도 무장대의 강력한 공격이 지속되었다. 4월 4일 새벽 2시 함덕지서를 다시 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⁵⁹⁾ 무장대는 4월 8일 밤에 조천지서를 또다시 습격하였다. 무장대 40여 명은 카빈총 4정과 99식 총 4정, 황린탄 2발을 가지고 습격하였으나 경찰의 반격을 받았다. 이 습격 사건으로 조천지서 건물에 일부 파괴되고 경찰 2명과 무장대원 2명이 사망하였다. 4월 14일 밤에 조천지서를 세 번째로 습격했는데, 수류탄 투척으로 지서가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경찰관과 서청 단원 여러 명이 행방불명되었다. 4월 14일 새벽에는 무장대가

59) 4월 3일 이후 무장대의 습격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된 바 없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이 채록한 조사 결과(『4·3은 말한다』 ②, 65~69쪽)와 대조하여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60)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7. 30).

교래리에 주둔 중인 경찰기동대 50여 명을 포위 습격하여 경찰 2명이 사망하였다.⁶¹⁾ 4월 8일에는 무장대가 성산면의 지서를 공격했으나, 교전 과정에서 무장대원 1명이 사살되고 경찰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⁶²⁾ 4월 10일 무장대원 8명이 안덕면 덕수리 대청 사무소를 습격하여 건물을 완전히 소각시킨 후 대청 단원 1명을 공격하여 부상을 입혔다.⁶³⁾

4월 18일에 무장대원 11명이 대정지서를 2차로 습격하여 15분간 교전이 벌어졌다. 무장대는 성벽을 지서로 오인해서 휘발유탄 2발을 투척한 뒤 퇴각하였다.⁶⁴⁾ 4월 21일 밤 11시에 경찰복으로 위장한 무장대가 모슬포지서를 습격하였으나 국방경비대에 의해 해산되었다.⁶⁵⁾ 4월 30일에 또다시 모슬포지서를 습격하여 폭탄(황린탄, 오린당)을 투척하였으나, 불발로 인해 퇴각하였다.⁶⁶⁾ 5월 6일 새벽 3시 30분에는 무릉지서가 무장대원 45명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는데, 20분가량 교전 후 무장대는 퇴각했다.⁶⁷⁾ 교전 과정에서 무장대원 1명이 사망했는데, 남로당 대정면당 간부인 유신출(인성리, 35)로 추정된다.⁶⁸⁾

미군정 당국은 4월 3일 무장봉기가 발생하자 4월 5일 아침 전라남도 경찰 약 100명을 응원대로 편성해 급파하는 동시에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김정호)를 설치하였다. 또 서북청년회 단원들도 증파되었다. 강경한 진압 작전이 펼쳐짐에 따라 경찰의 고문과 총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4월 8일 아침, 저지지서 경찰들은 무장대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저지리 명이동을 급습했다. 조일화(여, 20)의 자택에 들어와 남편 이달우의 행방을 추궁하던

61) 『투쟁보고서』;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1948. 4. 16); 《노력인민》 1948. 6. 3.
 62)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1948. 4. 12~4. 13).
 63) 『투쟁보고서』.
 64) 『투쟁보고서』.
 65) 『주한 미육군 제6보병사단 일일정보 보고』, 1948. 4. 22.
 66) 『투쟁보고서』.
 67)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1948.5.7); 『투쟁보고서』; 《4·3장정》 6, 47~48쪽. 『투쟁보고서』에는 습격 날짜를 5월 4일, 무장대원 수를 30명이라고 하였다. 《4·3장정》에는 습격 날짜를 5월 10일이라고 하였다.
 68) 《4·3장정》 6, 75쪽에는 유신출이 폭약(오린당)을 잘못 터뜨려 죽었다고 한다.

토벌대는 조일화와 그녀의 짓먹이 딸을 현장에서 총살했다. 이 사건은 무장봉기 발발 후 한림면 지역에서 일어난 첫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4월 8일 구좌면 평대리 주민 고두생(48)은 성산포지서에 수감되어 취조를 받다가 지서장(정성룡)이 발사한 총을 맞고 즉사하였다.⁶⁹⁾ 4월 14일 표선면 가시리 주민 강군열(28)과 강팽직(18, 가시국민학교 교사)은 경찰의 검거를 피해 일본으로 밀항하려다가 표선지서 경찰에 발각되어 ‘산물통계’에서 총살당했다.⁷⁰⁾ 마을 청년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이들의 죽음은 이 마을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제주비상경비사령부는 4월 22일부터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정하고 위반자는 총살에 처한다고 포고하였다. 4월 22일 북촌리 출신으로 부산에서 야간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김봉찬(20)이 처를 데리러 북촌리에 왔다가 함덕지서로 연행된 뒤 함덕리 ‘학기술’에서 총살당했다. 4월 24일 밤 9시경에 조천면 조천리에서 귀가하던 문홍목(21)과 고창우(29)가 순찰하던 경찰에게 총격을 받아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⁷¹⁾ 한편 4월 17일 조천면 대흘리 지경에서 남로당 간부 이종우가 중산간 마을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사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⁷²⁾

토벌대의 중산간 지역 마을에 대한 공세도 전개되었다. 4월 11일 아침부터 신엄지서 경찰과 기동대 혼합부대 30여 명이 광령리 2구를 습격했다. 오후 1시부터는 무장대 20여 명의 병력과 교전이 펼쳐졌는데, 무장대 측 기록에는 경찰 3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⁷³⁾

강경한 진압 작전이 펼쳐짐에 따라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총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4월 14일 광령리 김원옥(29), 박신돌(53), 신군식(20) 등이 중산간 지역을 수색하던 토벌대에 의해 총살당했다. 5월 7일 하귀리 김용

69) 『폭도 피상사건 발생에 관한 건』(1948. 4. 9).

70) 제주자유우호협의회, 『제주도의 4월 3일은?』 4, 강두진 증언.

71) 《독립신보》 1948년 5월 4일자.

72) 이종우 처 추순선의 증언(『그들 속의 4·3』, 296~296쪽)

73) 『투쟁보고서』.

명(24)이 상귀리 남쪽 부근에서 외도지서 경찰에 의해 무장대 혐의로 오인되어 총살당했다.

미군정은 4월 17일, 그동안 관망 상태에 있었던 모슬포 주둔 국방경비대 9연대에게 사태 진압을 명령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경찰에 비해 민족적인 성향이 강했던 9연대는 이 사건을 경찰 및 서청과 같은 극우 세력의 횡포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선선무 후토벌’을 원칙으로 정하고 무장대와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결과 1948년 4월 말 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연대 정보참모 이윤락 중위, 그리고 무장대 측 군사총책 김달삼 등이 만나, “72시간 안의 전투 중지, 무장 해제와 하산이 이루어지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상을 성사시켰다.⁷⁴⁾

74) 4월 말에 성사된 김익렬 9연대장과 김달삼 유격대총사령관 사이의 평화협상에 대해서는 제민일보 4·3취재반이 입수한 「김익렬유고록」의 내용에 의거해 많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평화협상 관련 내용을 서술하였다.

최근 김익렬이 평화협상 직후인 1948년 6월에 작성한 「참전기」가 발굴되었는데, 이를 활용한 김용철의 논문이 발표되어 더욱 치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김용철, 2010). 사건 발생 후 20여 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유고록」에 비해 「참전기」는 1948년 8월에 『국제신문』에 게재되었다는 현실적 제약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당대의 생생한 기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협상 일을 4월 28일로 추정했던 것을 「참전기」는 정확히 4월 30일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5월 1일 메이데이를 계기로 강화될 수 있는 유격대에 대해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격렬한 소탕작전을 전개한 끝에 유격대 쪽으로부터 회담 수용 의사를 전달받았음을 밝혔다. 4월 22일 선포문 산포로부터 회담, 회담 일자 조정 이유 등에 이르기까지 경위를 일시에 맞추어 정확히 기록하여 놓았다. 오후 4시에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 당일 밤에 열린 작전회의에서 최고지휘부가 유격대의 근거지를 확인했으니 총공격을 개시한다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회담이 미군의 전략에 따른 것이었고, 바로 4월 30일 밤부터 모슬포 관사에 무장대의 폭탄이 들어왔다고 공개하였다. 이 내용은 「투쟁보고서」에 무장대가 4월 30일 모슬포 지서를 습격하여 폭탄을 투척했다는 기록과 일치되어서 협상일이 4월 30일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라리 방화 장면을 보여준 동영상 필름 「제주도의 메이데이」는 4월 30일 밤 작전회의에서 총공격 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인 5월 1일 대대적인 공세가 펼쳐졌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한다. 오라리 방화사건의 조작 여부가 본질이 아니라, 미군 수뇌부의 총공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결국 「진상조사보고서」가 밝혀낸 하지 24군단 사령관의 강경진압에 대한 입장을 「참전기」가 더욱 확고하게 입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4월 말 평화협상은 미군정의 하지 사령관의 무력 진압 방침 결정으로 깨졌다. 하지 장군은 4월 27일 슈 중령을 제주에 보내 사태 진압을 위해 귀순공작과 무력진압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고려했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작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슈 중령의 4월 29일자 보고서에서 제주도 상황에 대해 “미 59군정중대장이 현재 제주도에 있는 병력을 확실히 통솔한다면 제주도에 있는 현재의 병력만으로도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충분하다. 공산주의자들과 게릴라 세력이 오름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활발한 작전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병력만으로도 진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 보고서는 하지 장군으로 하여금 무력진압을 결정하게 하였고, 결국 김익렬과 김달삼의 평화협상은 미군정 수뇌부에 의해 무시되었다.

평화협상 직후인 5월 1일 오라리 마을 방화사건이 발생, 협상이 파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방화는 우익 청년들이 저질렀지만, 미군정과 경찰은 “폭도들이 한 행위”로 조작하였다. 미군이 이 불타는 마을을 촬영, ‘제주도의 메이데이(May Day on Cheju-Do)’란 영상기록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5월 5일 제주에서 미군정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강경진압을 주장한 경무부장 조병옥과 선무귀순 공작 필요성을 역설한 김익렬 연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김익렬은 문책을 받아 해임되고, 다음 날 9연대장은 박진경 중령으로 교체되었다. 이제 강경 진압의 길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5월 7일에는 경찰 50여 명이 수산리·장전리·소길리·상귀리 등 중산간 마을에 대한 수색 작전을 펼쳤다. 장전리 ‘포제청’ 일대에서 무장대 2개 중대와 5시간 동안 교전이 펼쳐졌는데, 상호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⁷⁵⁾ 교전을 벌이고 돌아가던 경찰부대는 장전리 마을에서 주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여 고재생(42)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고남순(20, 제주중 3학년), 강중화(18), 고석주 등이 총상을 입었다.⁷⁶⁾

위와 같은 각 지역별 상황 전개에도 불구하고 5·10선거 전까지 제주도내에서

자료라고 생각한다.

75) 『투쟁보고서』.

76) 『4·3은 말한다』 ②, 26~30, 40쪽.

는 심각한 무력 충돌이나 주민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5. 5·10선거 거부투쟁

무장대는 5·10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투쟁을 전개하였다. “금번 선거를 통해 탄생하는 정부는 남한 군정이고 이승만의 단독정부이므로 적극 반대한다”는 취지 아래 적극적인 투쟁이 전개되었다.⁷⁷⁾ 투쟁 방식은 5월 10일 총선거에 참가치 말 것, 투표참가자를 감시하여 후일 숙청할 것, 투표 당일 전 부락민을 선동하여 산으로 피신케 하여 선거를 방해할 것 등으로 정해졌다.⁷⁸⁾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집중 공격하고 선거 관련 공무원을 납치하는 한편 선거인명부를 탈취했다.⁷⁹⁾ 제주도 전역에서 선거 관련 공무원들이 투표인 명부 열람 등 모든 선거 관련 업무 취급을 꺼림으로써 선거 실시에 어려움이 많았다.

조천면 관내에서는 선거일 이전부터 무장대에 의한 선거 방해투쟁이 전개되었다. 4월 19일 아침 신촌리 투표소가 무장대의 습격으로 소실되었다.⁸⁰⁾ 4월 21일 밤 11시에는 북촌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의 모든 선거 등록 서류들이 무장대에게 탈취되었다.⁸¹⁾ 5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천면 전역에 걸쳐 각 마을 사이에 있는 자동차 도로 8개소를 파괴하여 차단시켰다.⁸²⁾ 무장대는 4월 21일과 22일 밤 두 번에 걸쳐 구좌면 송당리를 공격하였는데, 교전 과정에서 무장대원 1명이 사살되고 다른 1명은 부상을 당한 채 체포됐다.⁸³⁾

77)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7. 18).

78)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10. 21).

79) 무장대는 5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를 제4차 작전 시기로 설정하여, “각개 격파의 전술로서 주력 부대를 2그룹으로 편성, 5·10 당일에는 각 부락을 유격하면서 투표 보이콧전을 전개(주로 남부). 그 후 세력을 집결하여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여 유격전을 매우 활발히 전개한 기간”이라고 하였다(「투쟁보고서」).

80)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1948. 4. 22).

81)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1948. 4. 27).

82) 「투쟁보고서」.

83) 「주한미육군 제6보병사단 일일정보보고」(1948. 4. 25~4. 26).

4월 21일 밤에 무장대는 대정면 관내 선거관리를 총괄하던 대정면사무소를 습격했다. 숙직 근무 중이던 면사무소 직원 정을진(하모리, 23)과 박근식(구역리, 27)이 무장대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어서 무장대는 동일리 선거인등록사무소를 습격하여 선거 관련 서류들을 탈취한 뒤 동일리 선거관리위원장 강왕침(50)을 총살했다.

선거 며칠 전부터 무장대는 대정면 관내 각 지역에 차량의 도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장애물을 도로마다 설치하였다. 선거를 반대하는 뼈라가 마을 곳곳에 뿌려졌으며, 많은 마을에서 미리 주민들이 선거를 거부하기 위해 산으로 피신해 버렸다. 중산간 마을인 신평리, 구역리, 무릉리 인향동은 무장대의 후방 지역으로서 ‘왓사부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선거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특별히 신평리에는 모솔포 주둔 국방경비대가 파견되어 무장대의 선거 반대 활동을 감시하기도 했다.⁸⁴⁾

4월 27일 한림면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6명이 애월면 신평리에서 무장대에 기습당하기도 했다.⁸⁵⁾ 5월 9일 애월면 동부 지역의 마을들은 선거를 거부해서 입산해버려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선거관리위원회로 되돌아왔다. 경찰지서와 경비대가 주둔한 애월리 인근 마을에서만 투표함과 투표용지 배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5·10선거를 며칠 앞두고 각 마을 주민들은 선거를 하지 않기 위해 투표 전날 이불과 간단한 식량을 짊어지고 산으로 피해 갔다. 무장대는 선거를 보이콧 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산으로 올려 보냈다. 주민들의 산행은 5월 5일경부터 시작됐다. 주민들이 마을 인근의 오름이나 숲으로 가서 머물다 선거가 끝난 후에야 마을로 돌아왔다. 그래서 선거 당일 마을에는 경찰 가족이나 대동청년단 간부, 선거관리위원 등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조천면 주민들은 5월 9일, 10일에 중산간마을로 피신하여 선거를 거부하였다.⁸⁶⁾ 북촌리 주민들은 선흘리로, 조천리·함덕리 주민들은 대흘리로, 신촌리 주민들은 와흘리로 올라갔다가 투표가 끝나자 내려왔다.⁸⁷⁾

84) 《4·3장정》 6, 47쪽.

85)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1948. 5. 1).

86) 광주지방법원 판결문(1950. 2. 3); 《노력인민》 1948년 6월 3일자.

제주도 전역에서 선거 관련 공무원들이 투표인 명부 열람 등 모든 선거 관련 업무 취급을 꺼림으로써 선거 실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1948년 5월 3일 조천리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 관련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며 전원 사퇴해버리는 등 조천면 관내에서 50% 가까운 선거관리위원들이 사임했다.⁸⁸⁾ 미군은 조천면의 실적이 특히 부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민규 조천면장에 책임을 물어 연행하기도 했다.⁸⁹⁾

5월 10일 선거 당일엔 무장대는 제주도내 각지의 투표소를 공격했다. 조천면 관내 14곳의 투표소가 제 기능을 못했다. 무장대는 대흘리 1구에 투표함을 가지고 온 서청 단원 3명과 서청 출신 교원 1명을 살해하였다.⁹⁰⁾ 오후 4시에는 북촌리 투표소가 불에 탔으며 모든 투표용지가 파손됐다. 같은 날 조천리에서는 국방경비대가 선거 거부와 관련된 조사를 받던 남자 1명이 탈출하려고 하자 사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⁹¹⁾

같은 날 무장대는 성산면 수산리 투표소인 수산리 향사를 공격했다. 철모를 쓴 무장대가 나타나서 총을 쏘며 향사를 포위하자 주민들은 놀라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피신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를 기다리던 여인 3명이 무장대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무장대는 향사에 불을 질러서 투표함과 모든 서류들을 모두 태워버림으로써 수산리에서는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또한 무장대의 자체 보고서에는 “5월 10일 수산리 선거사무소를 습격. 반동 가옥 소각, 반동 2명 숙청, 단선(單選) 완전 보이코트”라고 적고 있다.⁹²⁾

또 무장대는 표선면 가시리 투표소인 가시국민학교를 습격하였다. 오전 7시 쯤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과 향보단원, 주민 등 10여 명이 있었다. 99식 총 2~3정과 죽창으로 무장한 무장대 수십 명이 투표소를 포위하여 주민들이 투표를 못하게 막아섰고, 일부는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거인명부를 불태우게

87) 『이제사 말함수다』 1, 104~107쪽.

88) 『주한미육군 제6보병사단 일일정보보고』(1948. 5. 3);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1948. 5. 11).

89) 『진상조사보고서』, 208쪽.

90) 『투쟁보고서』.

91) 『주한미육군 제6보병사단 일일정보보고』(1948. 5. 10; 1948. 5. 11).

92) 『투쟁보고서』.

했다. 마침 투표소 바로 옆에 있는 학교 관사에서 잠자다가 깨어난 교장 문상형이 밖으로 나오다가 무장대의 죽창에 찔려 숨졌다. 그의 처 또한 방안에서 죽창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투쟁보고서』에는 “아부대 10명 가시리 습격. 선거사무소를 습격하여 투표함을 파괴하고 선거를 완전 보이콧. 반동 3명 숙청, 반동 가옥 1호(戶) 4동(棟) 파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미군정 보고서에도 “1948년 5월 10일 투표소 1곳이 습격을 받았다. 2명이 살해되고 모든 투표용지가 훼손됐다”고 하였다.⁹³⁾

구좌면 송당리·덕천리 투표소는 무장대의 투표 방해로 인해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무장대는 선거 전날인 5월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송당리·동북리·덕천리 선거사무소를 습격하여 투표함을 파괴하고 선거관리위원과 그 가족을 살해하거나 우익단체원의 집을 불태웠다. 『투쟁보고서』에는 “5월 9일 밤을 기하여 아 부대 10명이 송당리를, 11명이 동북리를 각각 습격. 송당리에서 반동 구장 처 1명, 반동(대청 간부) 1명을 숙청, 그들의 가옥 4호를 소각, 동북리에서 반동 1명 숙청, 반동 가옥 1동 소각, 반동 집 내의 미성, 의류, 기타 다수 몰수, 그리고 송당리, 동북리의 선거사무소를 각각 습격 파괴. 5월 10일 아침 덕천리 선거사무소를 습격하여 투표함을 파괴하고 반동 가옥 1동 소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림면에서 선거가 부분적으로 진행된 마을은 한림, 옹포, 협재, 금능, 월령리 등이고, 선거가 아예 실시되지 못한 곳은 귀덕, 수원, 금악, 동명, 명월, 상대, 월림리 등이다. 투표소는 한림국민학교, 금능리사무소, 재능교회 등에 설치되었다. 무장대는 금악리의 5·10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5월 9일 금악리 선거관리위원장 이병화(42, 금악국민학교 교장)를 명월리 ‘갯거리오름’으로 끌고 가서 저지리 청년회장 강임생(35)과 함께 살해했다. 무장대의 방해로 금악리에서는 5·10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결국 제주도 선거는 3개 선거구 중 남제주군 선거구만 간신히 치러져 무소속의 오용국이 당선되고, 북제주군의 2개 선거구는 투표율이 모자라 무효로 처리되었다. 북제주군 을구에는 한림면 금능리 출신의 양병직(40, 대청)과 한림리

93) 『주한미육군 제6보병사단 일일정보보고』(1948. 5. 9~5. 10).

출신의 박창희(52, 독촉국민회) 등이 출마해서 양병직이 다수 득표를 했으나 무효 처리되었다. 미군정은 북제주군 2개 지역의 선거 무효화를 공표함과 동시에 6월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결국 제주도 재선거는 무기 연기되었다.

6. 북한정권 수립 ‘지하선거’ 참여

1948년 5·10선거가 제주도에서 좌절된 이후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 치열한 무력충돌이 빚어졌다. 서로 평화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었다. 5·10선거 저지에 성공한 제주도 남로당과 유격대는 경찰과 우익단체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가족이나 대동청년단 가족 등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5·10선거의 거부는 미군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제주도민들에 대한 대탄압이 예견되었다.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강도 높은 진압작전을 전개하며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경비대 병력은 기존 9연대 1개 대대와 부산 5연대에서 차출된 1개 대대, 새로이 11연대 1개 대대가 파견되어 모두 3개 대대로 강화되었다. 박진경은 11연대장에 취임하여 본격적인 토벌에 나섰다. 조병옥도 담화를 발표하여 ‘강경진압 방침’을 분명히 하고, 경찰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한편 서청 단원을 계속 증파했다. 경비대가 주도하는 본격적인 토벌작전으로서 산악지대 소탕전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산간 지대의 주민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였다. 5월 27일까지 포로의 수는 3,126명에 달했고, 6월 중순에는 무려 6,000여명에 달하게 되었다. 5·10선거 직후인 5~6월에 토벌대와 무장대 간 상호 무력충돌로 인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한편 5·10선거 거부투쟁 이후 경비대의 강력한 토벌이 이루어지자 서서히 군 내부에서 박진경 연대장의 강경 방침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5월 20일 밤 9연대 병사 41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무기와

장비, 그리고 5,600발의 탄약을 소지하고 모슬포 주둔지를 빠져나가 대정지서를 공격하여 일부는 입산하였다. 10여 명씩, 혹은 몇 명씩 병사들이 부대에서 탈출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6월 18일에는 박진경이 부하에게 사살되었다.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배경용·신상우 등이 체포되고, 군법회의를 거쳐 문상길과 손선호 하사가 처형되었다.

박진경 연대장이 피살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방경비대는 중산간촌뿐만 아니라 해안지대 마을에 이르기까지 소요 가담자에 대한 수색과 검거 작전을 전개하였다. 6월 26일 하루에 조천면, 구좌면, 제주읍 등지에서 체포된 인원만도 200여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 무장대 간부는 2명에 불과했고, 무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검거한 3천여 명 포로는 경비대, 경찰, 미군이 합동 조사한 후 100여 명의 주모 혐의자만 남겨 놓고 전부 석방하였다. 이로써 경비대의 진압 임무는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되었다.⁹⁴⁾

1948년 7월 중순경부터 남한 전역에서 ‘지하선거’가 열렸다. 이는 북한의 정권 수립에 따른 것이었다. 4·3의 와중에 있던 제주도에서의 지하선거는 주로 백지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를 “북한에서 시행하는 8·25 총선거에 호응한 소위 지하선거”로 규정했다. 8월 31일 서귀면 호근리에서 실시된 지하선거를 “8월 31일 하오 9시경부터 12시까지 장총 또는 목봉 등을 휴대 무장한 산폭도 백여 명이 20명 또는 30명씩 부대를 만들어서 호근리 마을에 도착한 후 각 호를 방문하고 소위 지하선거 투표 실시에 백지에 서명 날인을 받을 때 마을의 남로당원들은 도로 안내 역할과 파수 역할을 맡았다”고 기록하였다.⁹⁵⁾

무장대의 강요에 마지못해 가명으로 이름을 쓰고 손도장을 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뒤에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엄청난 인명이 희생되었다. ‘백지날인’ 한 게 죄가 되어 총살의 원인이 되었다.

애월면 관내 각 마을에서도 8월에 접어들자 ‘백지날인’의 사례가 빈발했다. 애월리·금성리·하귀리·고성리·어음리 등지에서 백지날인의 사례가 확인된다.⁹⁶⁾ 지하선거를 위해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일은 무장대가 아닌 각 마을

94) 《조선일보》 1948년 7월 4일자.

95)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9. 30).

자위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해안 마을은 밤에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고, 중간 마을인 대정면의 인향동, 신평리, 구역리 등은 낮에도 도장을 받으러 나왔다.⁹⁷⁾ 한림면 금악리 주민들은 8월 초순에 ‘지하선거’ 연판에 서명하였고, 8월 26일 마을 내 비밀집회 자리에서는 김달삼·안세훈 등을 제주도 대의원으로 북한에 파견했다는 보고가 행해지기도 했다.⁹⁸⁾ 그 외에도 명월리·동명리 등지에서도 백지날인의 사례가 확인된다.⁹⁹⁾

무장대가 주도한 ‘백지날인’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토벌대와의 교전도 펼쳐졌다. 8월 18일 조수지서 경찰이 무장대 1명을 사살했으며, 8월 19일에는 한림지서 소속 경찰 4명이 협재리에서 무장대와 총격전을 벌였는데, 교전 과정에서 한림지서장 이화영(23)이 사망했다.¹⁰⁰⁾ 8월 19일 유격대원 20명을 포함한 무장대 40명이 구좌면 세화리를 습격하여 주민들에게 ‘백지날인’을 강요했다.¹⁰¹⁾ 8월 31일에는 김녕지서가 무장대 30여 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1948년 8월 21일부터 해주에서 북한 정권의 수립을 위해 남한의 지하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모여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 1,002명 중에는 김달삼을 비롯한 제주도 대표도 6명 포함되어 있었다. 김달삼은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서 4·3봉기의 정당성과 성과를 정리한 연설을 하였다. 김달삼을 비롯한 무장대 지도부가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제주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강경한 진압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장대 총책임이던 김달삼이 제주도를 떠남에 따라 무장대 조직은 2대 무장대 사령관이 된 이덕구를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96)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9. 22);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3. 8);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3. 31);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3. 31);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4. 11);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4. 30);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6. 27).

97) 《4·3장정》 6, 50쪽.

98)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8. 10. 4).

99)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50. 2. 4);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7. 11);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7. 18); 광주지방법원 판결문(1950. 2. 21).

100)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1948. 8. 28); 『4·3은 말한다』③, 251~ 252쪽; 『호국전몰용사공훈록』 6권, 62쪽.

101)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1948. 8. 24~8. 25).

1948년 9월에 접어들자 한동안의 소강상태를 깨고 사태가 악화될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미 전국 각 경찰관구에서 차출된 응원경찰대 800명이 8월 29일 제주에 들어온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의 응원경찰이 증파됐다. 그동안 무장대는 ‘8·25 지하선거’ 준비와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 차 김달삼 등 핵심지도부가 제주를 떠남에 따라 공세를 늦췄고, 토벌대 또한 정부 수립을 앞둔 때 우기(雨期)로 인해 진압작전이 지연됨으로써 소강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9월 중순 이후 무장대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미군 방첩대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몇 차례 게릴라 급습이 9월 15일과 10월 8일 사이에 일어났는데, 게릴라들은 우익단체의 회원들을 살해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납치하였으며 여러 마을에서 경찰지서를 공격하였다. 9월 18일에는 함덕리 주민 30여 명이 무장대의 지시에 따라 봉합탈을 올리기도 하였다.¹⁰²⁾ 무장대는 9월 17일 김녕지서를 공격했다.¹⁰³⁾ 9월 18일에는 성산면 고성리 2구 주민 오만순(전 향보단장)과 김만풍(전 구장)이 무장대원에게 살해되었다.¹⁰⁴⁾

반면 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총살 사례도 빈발하였다. 1948년 10월 5일 새벽 저지리 현운명(92)·현기병(62) 부자가 마을을 급습한 토벌대에 의해 자택에서 연행된 후 총살당했다. 10월 8일에는 명월리 정갑생(41)이 토벌대에 의해 동명리 ‘멸관절’ 앞에서 무장대 협조 혐의로 총살당했다.

1948년 10월 7일 제주도의 대부분의 마을들은 좌익전단과 종이로 만든 북한 국기로 넘쳐났다. 제주도 동쪽의 5개 마을에서는 약간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중 한 시위는 약 200명의 좌익들이 모여서 조천리의 경찰지서 바로 앞에서 진행되었다. 경찰은 공포탄을 발사하여 시위대를 해산하였다.¹⁰⁵⁾ 또한 10월 중순에는 각 마을에서는 유엔총회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을 반대하고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운동이 백지 진정서에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¹⁰⁶⁾ 이제 제주

102) 『주한미육군 971방첩대 월간정보보고』(1948. 10. 18).

103) 『주한미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1948. 9. 27~9. 28).

104) 『주한미육군971방첩대 월간정보보고』(1948. 9. 16~10. 15).

105) 『미국동군사령부 민정정보국 정보요약』(1948. 11. 15).

106)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3. 8);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3. 12);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3. 16);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8. 22); 제주지방법원

도 인민유격대는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고 북한의 인민공화국을 절대지지하는 방침으로 확실하게 전환하였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다. 10월 17일 9연대 송요찬 연대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10월 19일 제주에 파견하려던 여수의 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여순사건 직후 제주도 인민유격대는 크게 고무되었다. 10월 24일 총사령관 이덕구의 명의로 군·경 토벌대를 향해 빨치산의 편에서 함께 싸우자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무장대는 10월 23일 제주읍을 공격하고, 이동 중인 경비대 차량을 습격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애월면 고성리·상가리·어도리, 한림면 명월리, 조천면 신촌리 등에서는 여순사건에 호응한 대중 집회가 열리고 시위가 전개되었다.¹⁰⁷⁾

여순사건은 4·3사태를 극단적으로 강경하게 진압하려는 미군과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¹⁰⁸⁾ 곧바로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때로부터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결국 1947년 3·1사건 이후 확산된 대중운동과 4·3 봉기 이후 고조된 무장투쟁은 그 주도세력이 예상치 못한 대량 민간인 학살로 귀결되었다.

판결문(1948. 12. 17).

107) 광주지방법원 판결문(1950. 2. 28);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50. 7. 25);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6. 27);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7. 8); 제주지방법원 판결문(1949. 7. 11).

108) 4·3은 여순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으며, 또한 여순사건 때문에 4·3에 대한 진압의 강도는 더욱 드세어졌다. 14연대의 투입으로 제주도에 대한 강력한 진압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순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순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린 조치로서, 무자비한 진압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이었다. 특히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제주도 민간인 대학살이 본격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여순사건의 처리 경험이 제주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향후 4·3과 여순사건에 대한 밀도 있는 비교 검토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7. 맺음말

이상으로 『투쟁보고서』와 판결문 등 무장대 관련 사료를 중심으로 4·3 당시 대중운동과 무장투쟁의 전개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 결과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대중운동과 무장투쟁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한 4·3의 전개 양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우선 1947년 ‘3·1사건’ 이후 전개된 각 지역별 대중운동, 1948년 ‘2·7투쟁’의 새로운 실상을 정리하여 4월 3일 무장투쟁의 발발 배경을 이해하였다. 무장봉기를 결정한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의 비밀회의는 김용철·양은하의 고문치사 사건 직후인 3월 15일 북촌리에서 열렸으며, 무장봉기 결정 과정에서 경비대 9연대원 동원과 제주읍내 공격으로써 제주도 일원을 장악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으나 실패한 사실 등도 새롭게 밝혔다. 4월 3일 무장봉기 발발 상황과 4월 말까지 초기 무장대의 공세와 토벌대의 진압에 따른 민간인의 희생 실태를 사실적으로 정리하였다. 김익렬의 국제신문 기고문에 의거하여 기존 ‘4·28 평화협상’ 통설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한 결과, 미군정 수뇌부의 강경진압 방침을 더욱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무장투쟁이 5·10선거 거부, 북한정권 수립에 따른 ‘지하선거’ 참여 및 북한정권 지지로 전환하는 과정도 판결문 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또한 4·3 관련 판결문에 수록된 대중운동 및 무장투쟁의 주도자와 참여자가 작성한 문건, 지도한 집회·시위 등에서 제기된 투쟁의 취지, 슬로건, 방식 등을 통해서 당시대적 과제와 투쟁의 지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글에서 주로 인용한 무장대 관련 사료는 적지 않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투쟁보고서』는 1948년 7월까지 기록이며, 자신들의 무장투쟁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용 자료이므로 여타 자료와의 비교 검증을 필요로 한다. 4·3 관련 재판기록은 무장대의 활동을 ‘범법(犯法)’으로 규정한 법적 문서로서 무장투쟁 활동을 폭동·반란으로 인식한다. 무력충돌 과정에서 토벌대의 살상 행위, 전세가 역전된 1948년 10월 이후 토벌대의 강경진압작전과 집단학살 등 수많은 공권력의 범법은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4·3 당시 대중운동과

무장투쟁의 일면을 보는 근거이지 전모를 드러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사료임을 확인해 두고자 한다.

이 글은 4·3 당시 대중투쟁과 무장봉기의 표면적인 실상을 드러낸 정도에 불과한 글이기에 많은 쟁점을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분석과 해석의 과제를 산출했다는 점에서 4·3 연구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4·3 당시 산으로 올라간 무장대의 역사적 성격을 더욱 명징하게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위해 산으로 올라갔으며,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또한 4·3봉기 주체들의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통한 봉기의 지도부 및 참여자의 구성 및 활동, 당시 사회상에 대한 연구도 후일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투고일: 2월 11일, 심사완료일: 3월 6일, 게재확정일: 3월 10일]

<참고문헌>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①~⑤, 전예원, 1994~1998.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김용철, 『제주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소위 4·28 평화협상에 대한 반론』, 《4·3과 역사》 9·10, 2010.

김종민, 『제주4·3항쟁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42, 1998.

김창후 편, 『자유를 찾아서』(김동일 구술자료집), 선인, 2008.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20, 1993.

박명립,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8.

박찬식,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의 비교 연구』, 『여순사건과 대한민국의 형성』(여순사건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8.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양정심, 『1947년 제주3·1기념대회 주도세력에 대한 소고』, 『제주3·1사건 제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제주4·3연구소, 2017.

- 양정심, 『제주4·3항쟁』, 선인, 2008.
-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8.
- 장윤식,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4·3과 역사》 5, 2005.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제주4·3연구소 편, 『그들 속의 4·3』, 선인, 2009.
- 제주4·3연구소, 「통일되민 다 말허쿠다」, 《제주항쟁》 창간호, 1991.
- 제주4·3연구소, 《4·3장정》 6, 1993.
-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핍수다』, 한울, 1989.
- 함옥금, 「‘제주 4·3’의 초도화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허호준, 「제주4·3무장봉기 결정과정 고찰」, 《4·3과 역사》 7, 2007.
- 허호준,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Mass Movement and Armed Struggle during the Jeju April 3 Incident

PARK Chan-sik

The paper is based on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the main agents of the mass movement and armed struggle, such as the “Report of Jeju’s People’s Liberation Army” and 4·3 written judgement which was not us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rough this research, we have objectively described the development of the Jeju 4·3 incident involved in the mass movement and the militant struggle that was neglected in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and found many new facts.

We understood the reasons behind the outbreak of the armed uprising by organizing the new facts of the respective local mass movements since the March 1 incident in 1947 and the ‘2·7 Fight’. We also reconfigured the outbreak of armed insurrections, armed conflicts, peaceful negotiation initiatives, the fight for the denial of the May 10 elections, and the ‘underground secret elec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Keywords: mass movement, armed struggle, “Report of Jeju’s People’s Liberation Army”, 4·3 written judgement, 2·7 Figh, peaceful negotiation, fight for the denial of the May 10 elections